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익산시를 방문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뒤 2036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장수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군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뒤 참석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익산 · 장수의 장점 보전토록 적극 지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시·군 방문 일정으로 익산시와 장수군을 찾았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음이다. 익산과 장수는 전주와 김제, 군산에 이은 김 지사의 네 번째·다섯번째 방문지다.

이번 방문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도지사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이날 오전 익산시 신청사에 도착한 김관영 지사는 시 의정단과의 사전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함께 익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바이오 기술훈련 특구 지정을 비롯해 통합원광대 글로벌 캠퍼스 30 선정,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전북 농생명사업 선도지구 선정,

##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익산 · 장수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주제로 민생 현장 찾아

익산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권 철도망 반영 등

장수에서는 금남호남정맥 트레일센터 유치 등 논의

왕궁 축사매입 완료 등 지난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할 역점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권 광역 철도망 반영 △전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개정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지사는 7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나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 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도전 철학을 공유했다.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전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면서 “익산 시민들의 도전 정신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은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도시”라며 “농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려 전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익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김관영 지사님의 방문에 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찬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후 김관영 도지사는 장수군을 찾았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수군의회 의원,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과 의환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곧이어 군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2025년 장수군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300여명의 군민들과 함께 전북도정과 장수군정을 공유하며 상상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김 지사는 특강을 통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군민들은 △계북면 참새골 행복주택 건립 △계북동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금남호남정맥 트레일센터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하며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장수군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일정을 함께한 최훈식 군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에 발맞춰 장수군 역시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만남이 새로운 길을 열고, 빛나는 미래를 창조하는 ‘개신정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전경성의 자세로 초지일관 나아가겠다”며 “장수군이 가진 강점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장수=고관호 기자

## ‘GMO 입증, 단백질 잔류 여부 관계 없이’

민주 윤준병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 대표발의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MO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의 경우에는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들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Non-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들을 Non-GMO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동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들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음·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머리 맞대다’

도, 도의회 경산건위·전문가 초청 ‘첨단재생바이오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지공학, 오가노이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2025 첨단재생바이오 세미나’를 개최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윤세영 바이오 방위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송인 정책기획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윤세영 바이오 방위산업과장장의 ‘2025년 레드바이오 산업 중점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박상혁 에이템즈 공동대표의 ‘바이오인크 실용화의 길’ △조용근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의 ‘오가노이드의 새로운 시대와 전북’ △이영미 원광대 교수의 ‘전북, 첨단 바이오 연계 헬스산업의 중심지로’ △정창원 원광대 교수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북의 의료 혁신’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바이오 산업 육성 목표로 바이오 기업 30개사 유치, 국가예산 2,000억 원(중사업비 기준) 이상 확보, 보스턴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재생의료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R&D 지원 규모를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바이오 산업 3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바이오 소부장 분야는 도가 강점을 보유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과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지난해 수행한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과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3개 과제를 발굴하고, 2026년 국가예산 사업화를 목표로 중앙부처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는 2025년 2월 ‘첨단 재생 바이오’ 개정에 따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지공학 치료 등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관련 기업 유치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북도가 3대 등 전북의 바이오 산업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가 육성하려는 3대 핵심분야와 관련이 있는 조지공학, 오가노이드, 헬프,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 지원책 논의

김동구 도의원, 현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6일, 군산 베스 트웨스턴 호텔에서 새만금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구 의원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최재길 이차전지산업소산업과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현 단장, 성일하이텍 최낙삼 부장,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정성훈 부문장을 포함한 새만금 입주기업 9개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인프라 확충, 인력 수급, 지원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만호 기자

## “완주 · 전주 통합 추진 강력 규탄”

완주군의회 행정구 통합반대 특위, 반대 성명 발표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완주군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친 통합 시도로 인해 큰 갈등과 피해를 겪어왔다”며, “2013년 주민투표에서도

55.35%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2024년 상반기 55%, 하반기 66%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완주군민들의 확고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

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일부 찬성 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회 관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즉각 회수하고, 파기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통합 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여 완주군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민주 “명태군 특검 추진”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군 게이트 수사를 위한 ‘명태군 특검법’을 추진한다.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중 명태군 관련 의혹만 별도 법안으로 상안할 계획이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러가지 내란사태 조사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한 중요한 근거로 명태군 사건이 아닌지, 김건희 특검법 수사범위(에 넣기엔)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들이 당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태군 의혹이 내란을 촉발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검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하기로)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법안 상안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내용이 상당히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 추진 시점은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기를 특정한 합시다”며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 기존 합의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수사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최소한 의견을 수렴해서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급적 상설특검을 추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때때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했듯 (마약특검에 대해서도) 재요구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손 놓고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

## “대왕고래 원점 재검토”

민주, 1차 시추탐사 실패에

“尹 오만 · 독선이 부른 결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하자 해당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풍에서 깨어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며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집값,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마귀산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내 입장에서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 무능, 협박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갖고 1차 탐사 결과 ‘경계선을 확보할 만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